



3면

전북 '균형성장 3북' 중심지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음 9월 23일) 제385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전주매일



'올림픽데이인 2025 in 전주'가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과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팀 코리아'를 외치고 있다.

하계올림픽 유치 향해 전주서 질주

올림픽데이인 2025 in 전주

연대도시 전략 출발점... 지방도시 스포츠 역량 확인

단순 러닝 행사 넘은 K문화 결합 참여형 축제로 발전

전북특별자치도는 '올림픽데이인 2025 in 전주'가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6천 명의 참가자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 중심의 스포츠 행사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연대도시 전략의 상징적 출발점이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북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지방도시의 역량을 전국에 선보이는 계기가 됐다.

올림픽데이인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식 인증한 국내 유일의 올림픽 행사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체육회, 전주시가 공동 주관하며, IOC 창설일(6월 23일)을 기념해 올림픽 정신을 확산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4차례 개최됐으며,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린 역사적 무대다.

대회는 하프코스, 10km, 5km 세 종목으로 구성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접수 시작 직후 6천 명 참가자 전원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

은 관심을 받았으며, 20~40대 청년층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전주의 활기찬 도시 이미지와 국제 스포츠 행사 운영 역량을 함께 보여준 자리였다.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전북자치도는 전주시, 경찰청, 대한체육회 등과 5차례 협의회를 열고, 현장 실습과 합동 점검을 병행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380여 명이 교통과 안전관리를 담당했고, 전북대학교 간호학부·운동처방학과, 전주대학교, 완주소방서 등과 연계한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해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켰다.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합죽마을의 사물놀이패와 전주시 35개

동 자생단체의 거리응원이 코스를 따라 이어졌으며,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의 무대와 전주 출신 가수 휘인의 축하공연은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부대행사로는 올림픽 종목 체험 부스, 팬사인회, 완주 인증 포토존 등도 운영돼 참가자 만족도를 높였다.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도 철저히 이뤄졌다. 시내·마을버스 22개 노선을 조정하고, 시외·고속버스 임시승강장을 마련했다. 실시간 내비게이션 우회 안내, 누리집 배너, SNS 홍보, 안전안내 문자 발송, 종교시설과 공동주택 현장 방문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도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러닝 행사를 넘어 'K-스포츠'와 'K-문화'가 결합된 전국민 참여형 축제로 발전했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전주를 함께 달리며 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망을 공유했고, 이는 전주의 문화적 경쟁력과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대회 운영 경험과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져갈 계획이다. 전주는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를 고루 갖춘 도시로서, 향후 하계 올림픽 유치에 걸맞은 준비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올림픽데이인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열망과 전북의 비전을 전국에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함께 그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전북이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데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전주, 하계올림픽 메인 개최도시 지위 변함없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하계올림픽 육상 종목의 서울 배치가 전주의 메인 개최도시 지위를 훼손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폐회식은 개최계획상상 전주 개최로 명시돼 있으며, 이를 서울로 변경

"개폐회식 전주 개최... 서울 변경 논의된 바 없어"

하는 방안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마라톤 등 올림픽의 상징적 종목 역시 개최도시인 전주에서 열릴 계획으로, 전주가 올림픽의 중심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서울과의 협력은 경기장 신설 제로화라는 IOC의 기조에 부응하고, 국제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대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라는 설

명이다.

경기장 배치 조정 과정에서 일부 종목이 서울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해당 종목이 배치했던 타 광역단체와의 협의도 마무리됐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전주의 메인 개최도시 위상은 확고하며, 서울과의 협력을 통해 오히려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핵심 건조·전작권 환수'

이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 '통상·안보 타결'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과 안보 합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

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등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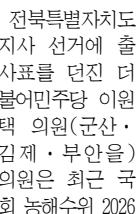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도 담겼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경우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뉴시스

"농어민 삶 지키는 예산 국가의 근간 지키는 일"

민주 이원택 의원,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 2026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곧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다"며 지역 현안과 농정 전반의 핵심 과제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그는 현장에서 듣고, 예산으로 답하는 '농어민 지킴이'로서 각종 전북 및 농어촌의 현안 해결을 정부에 절실히 요구했다.

1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구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전북이 K-푸드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농식품 수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복원 의지를 주문했다.

아울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운영 주체를 '한국식품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물류

체계 개선과 인증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새만금수목원과 국가정원 사업의 신속 추진, 사료작물 종자생산단지 조성, 콩 수매예산 증액, 농업재해 대응 배수개선사업 확대 등 농어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예산'을 꼼꼼히 챙겼다.

특히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지역 먹거리 지킴이를 이루는 것이 농정의 본질"이라며 직불금 현실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재개, 4H·생활개선회 지원 복원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그는 새만금항 신항 항로준설사업의 국비 반영을 강력히 주장하며, "새만금산단 본격 가동 이후 늘어날 물동량에 대비한 항만 인프라 확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격포 여객선터미널 노후시설 개선, 김 산업지구 조성 등 전북 해양산업 기반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은 농어민의 안정된 삶에서부터 출발한다"며 "국가근간이 되는 농업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생존의 차원에 따른 예산이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